

연구

07-12

공공개혁 -01

증장기 재정수요 전망과 시사점

김성태

중장기 재정수요 전망과 시사점

1관1쇄 인쇄/ 2007년 12월 10일

1관1쇄 발행/ 2007년 12월 1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53-9

6,000원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요 약.....	7
I. 서 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문헌조사 및 기존 연구	17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2
II. 중기 재정수요 전망.....	24
1. 시대별 재정수요의 변화추이	24
2. 경상적인 중기 재정수요 전망	25
1) 분야별 재정수요의 기준선 전망을 위한 회귀분석	8
2) 분야별 중기 재정수요 전망: 2007~2011년	24
3. 신규 재정수요 전망	47
4. 기타 재정수요	48

목 차

Ⅲ. 장기 재정수요 전망	49
1. 주요 경제사회 환경요인 전망	49
1) 고령화와 저출산	49
2) 세계화의 가속화	51
3) 잠재성장률의 둔화	55
4) 양극화의 심화	66
5) 기타 환경요인	55
2. 주요 경제사회 환경변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	57
1)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57
2) 고령화와 저출산이 장기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60
3) 세계화의 가속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66
4) 잠재성장률의 둔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68
5) 양극화의 심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69
6) 기타 환경요인의 변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71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3
참고문헌	78
부 표	83

표 2-1. 순환형 변동 유형의 중기 재정수요 전망	34
표 2-2. 증가형 추세 유형의 중기 재정수요 전망	54
표 2-3. 감소형 추세 유형의 중기 재정수요 전망	74
표 3-1. 우리나라 평균수명 추이	05
표 3-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변동 추이	05
표 3-3.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및 전망	25
표 3-4. 우리나라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및 전망	35
표 3-5.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46
표 3-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계	07
부표 1. 총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
부표 2. 일반행정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4
부표 3. 국방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5
부표 4. 경제개발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6
부표 5. 사회보장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7
부표 6. 교육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8
부표 7. 주택건설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89
부표 8. 문화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90
부표 9. 기타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91

그림 목차

그림 1. 총재정지출 변동추이	27
그림 2. 일반행정 재정지출 변동추이	29
그림 3. 국방지출 재정지출 변동추이	31
그림 4. 경제개발 관련 재정지출 변동추이	33
그림 5.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변동추이	35
그림 6. 교육 재정지출 변동추이	37
그림 7. 주택건설 관련 재정지출 변동추이	39
그림 8. 문화오락 관련 재정지출 변동추이	40
그림 9. 순환형 변동 유형 재정수요 전망	43
그림 10. 증가형 추세의 재정수요	44
그림 11. 감소형 추세의 재정수요	46
그림 12.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	48
그림 13. 재정지출 및 수입액(GDP 대비 비중)	66
그림 14. 공적연금 급여 및 보험료(GDP 대비 비율)	66
그림 15. 건강보험 급여 및 보험료(GDP 대비 비율)	6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요에 대하여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재정수요는 정부부문이 공급하여야 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다. 중기에서는 재정수요를 경상적 재정수요, 신규 재정수요 및 임시적 재정수요로 구분하여 경상적 재정수요에 대해 중점을 두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분야별로 볼 때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도 상당 기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반행정 재정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조직의 경량화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재정수요를 전망한 결과 고령화의 진전이 빠르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어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잠재 경제성장률은 낮아져 재정공급이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현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변화로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성장잠재력의 둔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과 BRICs 경제의 부상,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 신기술의 발전과 혁신,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 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사회분열 현상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중기 재정의 수입과 재정수요에 여러 경로(channel)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재정수요(fiscal demand)는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demand for public expenditures)로 정의될 수 있다. 재정수요는 재정공급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그 개념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기적으로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중기 재정수요를 올바르게 전망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중기 계획 및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재정수요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재정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수요를 올바르게 전망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재정수요의 변화추이를 올바르게 전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둔화와 저성장의 함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장기 계획 및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한국의 경제사회 환경변화가 중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중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고 재정수요와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요에 대하여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재정수요는 정부부문이 공급하여야 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다. 재정수요는 크게 세 가지 유형-경상적 재정수요, 신규 재정수요 및 임시적 재정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경상적 재정수요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변동추이를 토대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신규 재정수요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서 집권 정부의 정책의지도 반영된다. 셋째로 예상치 못한 돌발적 요인에 발생하는 임시적 재정수요는 근본적으로 확률변수의 속성을 갖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적 재정수요를 중심으로 중기 재정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MF의 통합재정수지 체계에 의해 정부지출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분야별 재정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 1970~2005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수요의 변동추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 분야별 재정수요의 변동패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첫째 유형은 순환적 변동(cyclical fluctuation)을 보이는 것으로서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 주택건설 재정수요 및 교육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유형은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국방 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유형은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사회보장 재정수요와 문화오락 재정수요 및 기타 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유형별 재정수요의 변동을 토대로 2006~2011년 기간 동안 각각의 재정수요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수요의 유형별 예측결과, GDP 대비 재정수요의 비중의 관점에서 순환적 재정수요의 경우 경제개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주택건설 재정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의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경제개발지출을 감소하는 것으로 충당하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별로 올바른 정책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국방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반행정 재정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 정부는 일반행정 재정지출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조직과 행정제도를 개편하여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재정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방부문의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수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예측결과가 나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평가된다. 단 문제는

적절한 수준과 재원충당의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장기 재정수요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현행의 조세제도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점진적인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극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수요는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의 둔화는 근본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장기 재정수요는 장기 재정공급을 초과하여 전형적인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재정의 초과수요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방안은 재정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는데 조세제도의 개편과 같은 제도적 개편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방안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그와 함께 한국경제가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근본적으로 성장전략을 바꾸어야 되는 과정에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둘째 방안은 재정수요를 분야별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정

수요를 통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궁극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여 잠재성장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3. 평 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을 점검하고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가 재정의 중장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기 재정수요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경상 재정수요는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는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중기의 경상적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접근방법은 앞으로 중기 재정수요 전망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장기적인 재정수요를 전망한 결과 현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부터 장기적인 재정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대비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정수요를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공급의 확충이 유일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는 제안은 정책 당국자가 장기 재정정책의 수립에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균형 있는 공공부문 규모와 역할 모색

중장기 재정수요 전망과 시사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변화로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성장잠재력의 둔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과 BRICs 경제의 부상,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 신기술의 발전과 혁신,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 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사회분열 현상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중기 재정의 수입과 재정수요에 여러 경로(channel)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재정수요(fiscal demand)는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demand for public expenditures)로 정의될 수 있다. 재정수요는 재정공급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그 개념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수요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한국의 경제사회 환경변화가 중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산업 간 양극화 및 소득의 양극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조달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미국과 일본 등과의 FTA

의 추진 및 남북경제협력 등 새로운 재정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은 다수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수요를 올바르게 전망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중장기 계획 및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재정수요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재정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수요를 올바르게 전망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 재정수요를 경상적인 수요와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재정수요와 일시적인 재정수요로 구분하고 유형별 재정수요를 전망하게 될 것이다. 향후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 재정수요의 변화추이를 올바르게 전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둔화와 저성장의 함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장기 계획 및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자본과 노동의 단순 투입 증가에 의한 40년간의 물량 위주의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성장잠재력의 둔화에 의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은 경제의 잠재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크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재정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

회보장 지출에 대한 재정수요를 분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고 재정수요와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조사 및 기존 연구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한 전망은 기본적으로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기 재정수요의 전망을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주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예측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국내외 주요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은 KDI와 한국은행 및 OECD, IMF와 같은 기관들의 전망치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중 미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최근 중요한 재정수요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

김종면·이철희·전영준(2003)은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가계소득분포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를 바탕으로 의료지출의 규모를 예측하였다. 김종면·성명재(2004)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장기 재정지출을 추정하였다. 김종면·성명재(2004)는 특히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특성을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출 증가전망을 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이 GDP 성장률보다

2~2.5배 정도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장기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중 전통적인 방법은 거시적인 방법인데 주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경우 재정수요는 결국 재정지출의 규모로서 추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래 재정수요의 전망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재정지출변수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다수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이 설정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한국은행(BOK)을 중심으로 개발된 모형(한국은행, 1990; 이종건, 1994, 함정호·최운규, 1995; 김양우·이궁희·장동구, 1997; 김양우·장동구·이궁희, 1997, 김양우·이궁희, 1998)과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모형(백용기·오상훈, 1993)과 최근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모형(박종규, 1996, 1998a, 2000)과 국회예산정책처(2005) 모형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재정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설정된 모형은 한국조세연구원의 박종규(1996, 1998a, 2000)는 거시경제모형 중 재정 블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주요 재정변수들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중장기 재정수요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중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접근방법의 하나는 기준선 전망(baseline forecasting) 방식이다. 이는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이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주요 거시경제변수 및 재정관련 변수들을 모두 모형에 포함시킨 다음 미래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만한 세입과 세출의 정책변화가 전혀 없다는 가

정하에 거시경제의 변동에 따라 재정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종규 외(2000)는 기준선 전망 방식을 이용하여 2001~2005년 기간 동안의 거시경제 및 세입과 세출 전망을 수행하였다.

분야별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중 흥미로운 방법은 국가자료 내지 다수의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예측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각종 경제사회변수들 - 예로서 수출입 비중, 산업구조, 도시인구 비중, 인구구조, 조세부담률 - 을 통제한 후 GDP 대비 재정지출의 분야별 비중을 GDP 또는 일인당 GDP에 회귀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분야별 중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것이다. 전승훈(2006)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을 외국의 분야별 재정지출과 비교하였다. 박형수(2005)는 한국의 재정지출구조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는데 한국의 재정지출구조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에 지출이 편중된 반면 복지예산의 비중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추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 특히 재정지출에 대한 정책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예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2005)에서 발간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예산과 정책목표』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 자료가 될 것이다. 2005년의 경우는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 방향』이라

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과거의 경우 고영선(1999, 2003)에서 볼 수 있듯이 중기 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장기 재정수요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인 한국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전주성(2004)은 아무리 현재의 정부부채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 기초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장기 재정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동건 외(1998)는 우리나라의 적자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김성순(2001)은 Ahmed and Rogers(1995)의 현재가치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1970~1999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호(2001) 및 김동건·김성순·김성태·이연호(2005)는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1997년 이후 국가부채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정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Huh et.al.(2005)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정한 결과 모든 국가들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장기 재정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사회의 환경요인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참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고령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고령화 관련 연구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연구로는 Miles(1999), Shimasawa(2004), Shimasawa and

Hosoyama(2004) 등 다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 총괄보고서에서는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예로서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고령화와 교육,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고령화와 장기요양제도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금융정책에서 고령화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안종범(2003)이 고령화에 따라 조세부담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고령화가 세원 및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 최준욱·전병목(2004)에서는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금기여금과 운영수익을 제외한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향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금관련 조세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최준욱·전병목·김우철(2004)이 있다.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공공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개발연구원(2005) 제3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2050년까지의 인구예측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를 예측하고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한편 김종면·이철희·전영준(2003)은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가계소득분포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를 바탕으로 의료지출의 규모를 예측하였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현재의 취약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김용하(2003, 2005)와 문형표·김용하(2004)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 밖에도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혜훈(2002)과 홍기석(2003)은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안중범(2003)은 고령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진희(2003)와 김원규(2004)는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력 둔화의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대일(2004)와 신관호·황윤재(2005)가 있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issue paper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수요의 전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를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중기 재정수요의 전망은 향후 5년간 분야별 재정수요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예측하게 될 것이다. 재정수요의 분야는 경제개발, 주택건설, 사회보장, 교육, 국방, 일반행정, 문화오락 및 기타 분야로 구분될 것이다. 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것은 한국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장기 재정수요의 전망은 정교한 거시계량경제모형에 기초하여 예측하는 것은 예측기간이 30년 정도로 너무 길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기 재정수요의 전망은 정량적인 접근방법보다는 정성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21세기 경제사회 환경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전과 양극화의 심화 및 세계화의 진전이 장기적인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장기

적으로 재정수요와 재정공급 능력을 예측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게 될 것이다.

중기 및 장기의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중장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에 기초한 주요 재정수요 관련변수의 예측(forecasting)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과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기 재정수요에 국한하여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한 기준선 재정수요 전망을 하게 될 것이다. 즉 1970~2005년 기간 동안 분야별 주요 재정수요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다음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중기 재정수요를 전망하게 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장기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Ⅱ. 중기 재정수요 전망

1. 시대별 재정수요의 변화추이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수요 측정 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공공재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현실세계에서 관찰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이지 재정수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최적 수준의 재정수요를 공급한다는 가정 하에 최적 재정지출을 재정수요로 간주하여 재정수요를 예측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시대별로 정부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3·4공화국에서는 경제성장 및 국방력 강화가, 5공화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개선과 교육 분야의 기반확충이, 6공화국에서는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문민정부에서는 경제력 강화를 위한 경제 분야 투자가, 국민의 정부에서는 복지 분야가, 참여정부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각각 재정운용의 주요 목표가 되어 왔다.

시대별 정부의 재정운용의 목표에 따라 재정수요의 구성 또한 변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기 재정수요를 분야별로 전망하는 경우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의 재정수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경상적인 재정수요이며, 둘째는 신규 재정수요이며, 셋째는 기타 재정수요이다. 경상적인 재정수요는 주로 경제의 성장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로서 교육, 공공주택건설, 사회보장, 문화, 국방 등의 재정수요로서 구성된다. 신규 재정수요는 경제·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재정수요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신규 재정수요가 될 것이다. 기타 재정수요는 임시적인 재정수요로서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의 발생에 의해 창출되는 재정수요를 예로서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남북한이 통일되는 경우 창출되는 재정수요가 될 것이다.

2. 경상적인 중기 재정수요 전망

경상적인 재정수요는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이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이다. 예로서 국방비 지출, 교육비 지출, 사회보장 지출 등은 예측 가능한 재정수요로서 경제의 성장과 발전단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분야별로 지속적인 재정수요를 전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로 과거 35년 동안 추세를 토대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에 바탕을 둔 기준선 전망 방식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 재정지출에 대한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재정지출(G)이 재정수요(G^*)의 함수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 $G=f(G^*)+\epsilon$ 와 같은 방정식

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¹⁾ 따라서 관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는 관측 가능한 재정지출의 함수가 되므로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서 재정지출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수요 전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내외 경제에 대한 전망은 기존의 예측치들을 이용하였다.

1) 분야별 재정수요의 기준선 전망을 위한 회귀분석

(1) 개 요

분야별 재정수요의 기준선 전망 또는 예측(baseline forecasting)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분야별 재정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환경의 주요 결정요인(factors)을 분석하여 향후 수년 동안의 재정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특정 재정수요의 결정요인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재정수요의 유형은 대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IMF의 통합재정수지 방식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계정의 분류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IMF의 통합재정수지 방식에 따라서 재정수요를 분류하였다.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자료출처는 다음과 같다. 총재정지출을 비롯한 분야별 재정지출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인구 관련 자료 및 기타 자료는 통계청의 KOSIS 자료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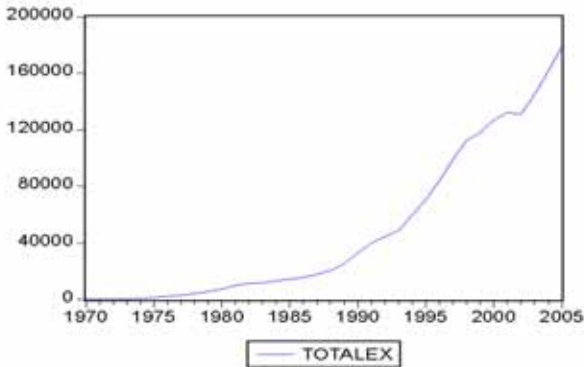
1) 여기서 ϵ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2) 총재정수요 결정요인 분석

우선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재정지출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재정지출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총재정지출 변동추이

(단위: 10억 원)



총재정지출의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1>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것은 GDP에 대한 총지출의 탄력성 즉 재정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65로서 1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은 1.65%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가 상당히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공재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조세부담률(변수 TAXRATE)

에 대한 추정계수는 -0.094 로 추정되어²⁾ 공공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공재 수요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조가 총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농림어업과 같은 1차산업의 비중과 비례하여 총지출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대외개방도 역시 총재정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FOREIGN 변수)는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되었다. 대외개방도가 커질수록 총재정수요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자본 역시 재정수요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대변수(proxy variable)로는 인구 전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변수(HIGHSCHOOL/POP)를 이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인적자본이 축적될수록 보완적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역시 교육 재정수요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로, 흥미로운 것은 노령화가 진전될수록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분석에서 노령화지수 변수(AGEINDEX)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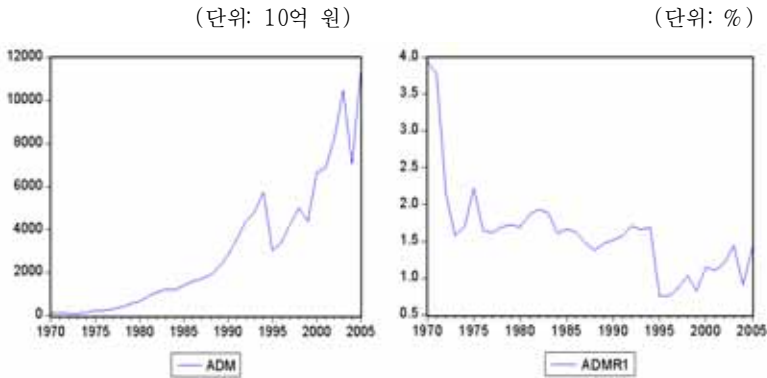
2) 조세부담률 추정계수의 t -값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역시 민간재와 같이 가격에 대해 수요는 반비례하는 것을 나타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1차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회귀변수 AGRRATIO에 대한 추정계수가 0.12 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회귀변수 SERVICERATIO에 대한 추정계수가 0.04 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행정 재정수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일반행정 재정지출에 대한 추이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일반행정 재정지출 변동추이



주: ADM은 수준을 ADMR1은 GDP 대비 비중을 나타냄.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행정 재정지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속도는 빨라졌다. 주목할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일반행정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2>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것은 GDP에 대한 총지출의 탄력성 즉 일반행정 재정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39로서 1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일반행정 재정지출은 0.39%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반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반행정 서비스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조세부담률(변수 TAXRATE)에 대한 추정계수는 1.23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약간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구한다. 즉 조세부담률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가 일반행정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의 비중과 비례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재정수요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역시 일반행정 재정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FOREIGN 변수)가 커질수록 일반행정 재정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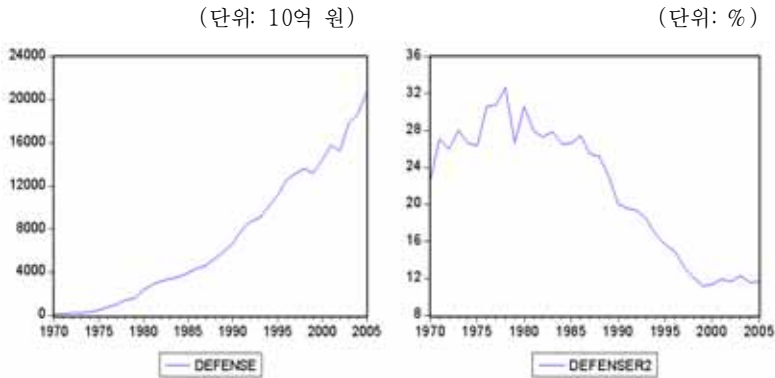
인적자본 역시 재정수요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인적자본이 축적될수록 보완적으로 일반행정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역시 재정수요의 규모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노령화가 진전될수록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분석에서 65세 노령인구 변수(AGEINDEX)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다.

(4) 국방지출 재정수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국방지출 재정지출에 대한 추이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Ⅰ 그림 3. 국방지출 재정지출 변동추이



주: DEFENSE는 국방지출수준을 DEFENSER2는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을 나타냄.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지출 재정지출은 1970~2005년 전 기간 동안 일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4%에서 시작하여 32%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서 10%대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반행정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3>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GDP에 대한 총지출의 탄력성 즉 국방지출 재정수요의 소득탄력성이 2.16으로서 1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국방지출 재정지출은 2.16%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지출 서비스가 상당히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방지출 서비스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조세부담률(변수 TAXRATE)에 대한 추정계수는 0.05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져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POP)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11.02으로 추정되어 인구

가 1% 증가하는 경우 국방비 지출은 11.02%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양 변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국방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가 국방지출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국방에 대한 재정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역시 국방지출 재정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FOREIGN 변수)가 커질수록 국방지출 재정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자본 역시 국방지출 재정수요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 인적자본이 축적될수록 국방지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역시 재정수요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증가와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증가가 국방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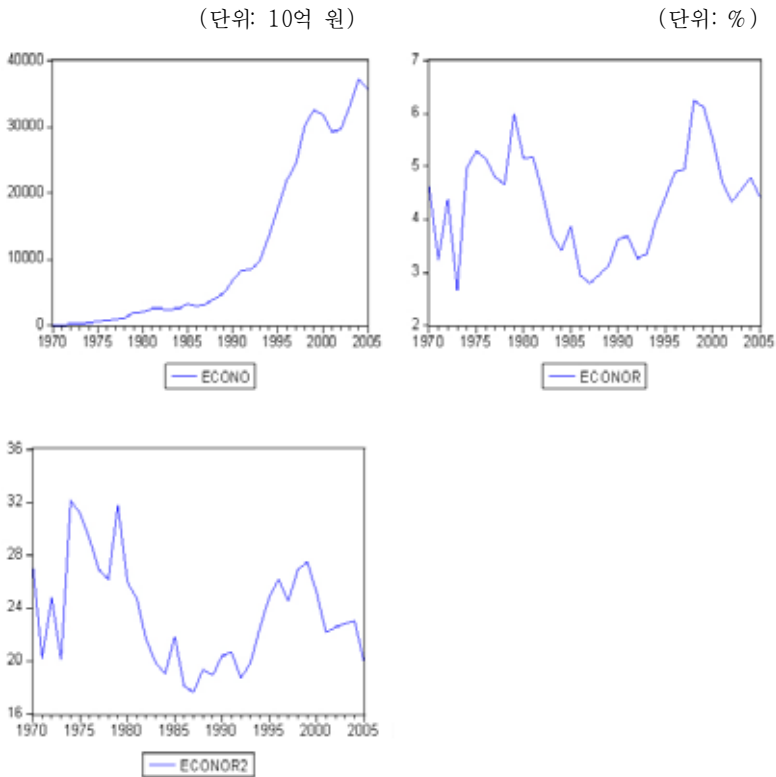
(5) 경제개발 재정수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경제개발 재정지출에 대한 추이와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개발 재정지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주목할 것은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이후 크게 두 번의 순환국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 사이에 정점 수준인 30%에 도달한 다음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10%대에 머물렀다. 이후 다시 한 번

소규모의 순환국면을 보인 후 2005년 현재는 경제개발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도달하고 있다.

| 그림 4. 경제개발 관련 재정지출 변동추이



주: ECONO는 경제개발관련 재정지출수준을 ECONOR은 GDP 대비 비중을 나타냄.

경제개발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4>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GDP에 대한 총지출의 탄력성 즉 경제개발 재정수요의 소득탄력성이 2.92로서 1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경제개발 재정지출은

2.92%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개발 서비스가 상당히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개발 서비스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조세부담률(변수 TAXRATE)에 대한 추정계수는 0.12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가 경제개발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차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의 비중과 비례하여 경제개발 지출에 대한 재정수요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역시 경제개발 재정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외개방도(FOREIGN 변수)가 커질수록 경제개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자본의 경우 인적자본이 축적될수록 경제개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경우 15세 미만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경제개발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양비(DPR 변수)가 증가할수록 경제개발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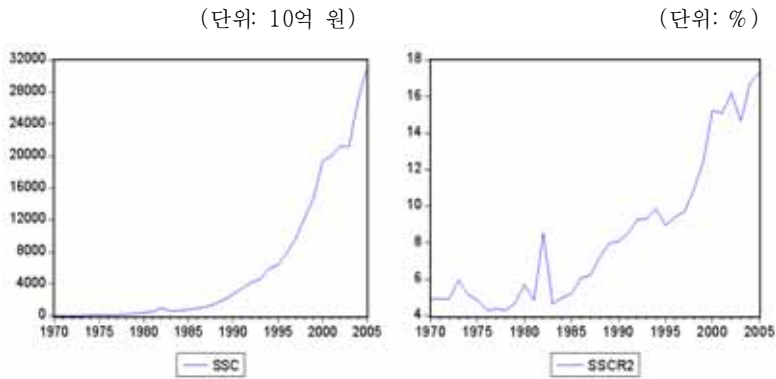
(6) 사회보장 재정수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대한 추이와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 재정지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절대수준에서 미미하였다. 이는 정부가 주도한 경제성장 전략에서 분배보다는 일단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양적 성장중심의 전략에 기초한 결과였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 급격한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더욱 증가

속도가 커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총재정지출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10%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차 비중이 커져 2005년 현재는 사회보장 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에 도달하고 있다.

| 그림 5.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변동추이



주: SSC는 사회보장관련 재정지출수준을 SSCR2는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을 나타냄.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5>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것은 GDP에 대한 총지출의 탄력성 즉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소득탄력성이 2.91로서 1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지출은 2.91%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가 상당히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조세부담률(변수 TAXRATE)에 대한 추정계수는 -0.83으로 추정되어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 사회보장지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재

정지출 수요는 세금가격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지고 그 값이 양(+)의 값을 보인 반면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경우 세금가격이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하여야 될 것이다. 이는 세금부담이 커지는 경우 사회보장 재정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가 사회보장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차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재정수요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역시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인적자본이 축적될수록 사회보장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역시 재정수요의 규모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부양비(DPR 변수)가 증가할수록 사회보장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므로 사회보장 재정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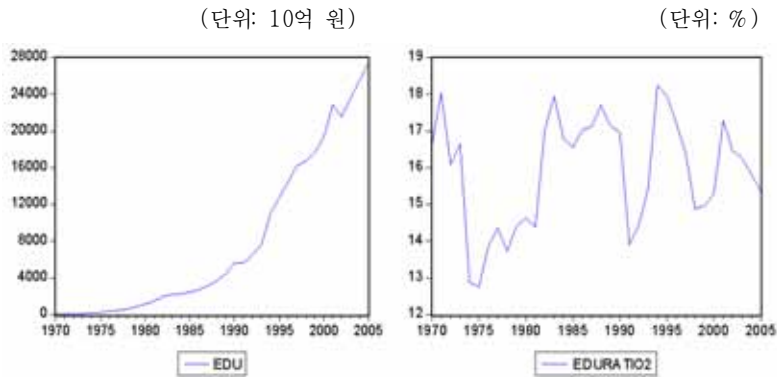
(7) 교육 재정수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교육 재정지출에 대한 추이와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재정지출은 1970~2005년 전 기간 동안 일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 1990년 이후에는 증가속도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총재정지출에서 교육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18%의 높은 수준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5년에는 12%까지 감소한 다음 수차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3회의 순환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높았던 연

도는 1994년으로 18.2%였는데 현재는 15.35%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 재정수요가 순환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변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6. 교육 재정지출 변동추이



주: EDU는 교육수준을 EDURATIO2는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을 나타냄.

교육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6>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GDP에 대한 총지출의 탄력성, 즉 교육 재정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5로서 1보다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교육 재정지출은 0.5%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상당히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조세부담률(변수 TAXRATE)에 대한 추정계수는 0.71로 추정되어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여도 교육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교육에 관

한 한 세금부담에 관계없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인구규모(POP)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9.36으로 추정되어 인구가 1% 증가하는 경우 교육비 지출은 9.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인구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큰 것은 교육의 혼잡도가 매우 큰 것을 의미하므로 민간재에 준하는 혼잡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구조가 교육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교육에 대한 재정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역시 교육 재정수요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밝혀져 인적자본이 축적될수록 교육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역시 재정수요의 규모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의 증가가 교육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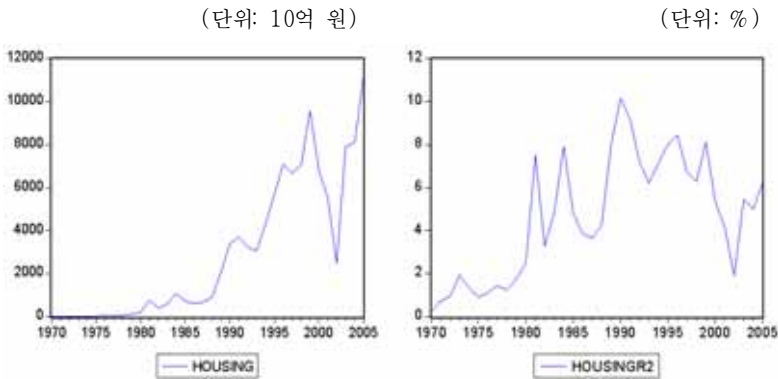
(8) 주택건설 재정수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주택건설 재정지출에 대한 추이와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건설 재정지출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절대수준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1990년 초반 이후 급격한 속도의 증가세를 보여 1999년에는 9조5천억 원으로 최고수준에 도달한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2조 원대로 바닥권에 이른 후 다시 증가하여 2005년 현재에는 1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총재정지출에서 주택건설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10% 이하의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순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택경기의 순환과 맞물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7. 주택건설 관련 재정지출 변동추이



주: HOUSING은 주택건설관련 재정지출수준을 HOUSINGR2는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을 나타냄.

주택건설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7>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주목할 것은 GDP에 대한 총지출의 탄력성 즉 주택건설 재정수요의 소득탄력성이 4.04로서 1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주택건설 재정지출은 4.04%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건설 서비스가 상당히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택건설 서비스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조세부담률(변수 TAXRATE)에 대한 추정계수는 -5.84로 추정되어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 주택건설지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지출을 제외한 여타 재정지출 수요는 세금가격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지고 그 값이 양(+의 값을 보인 반면 주택건

설 재정수요의 경우 세금가격이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하여야 될 것이다. 이는 세금부담이 커지는 경우 주택건설 재정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가 주택건설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차산업의 비중과 비례하여 주택건설 지출에 대한 재정수요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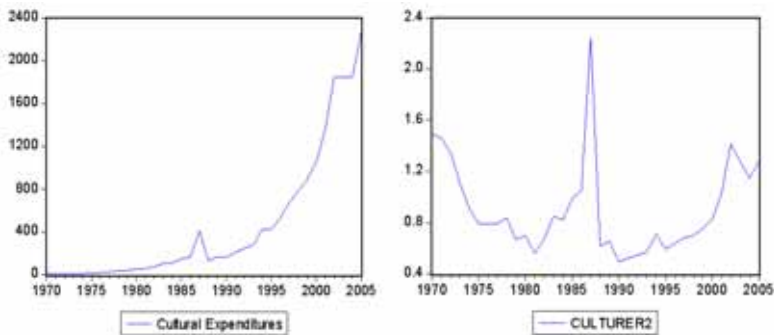
인적자본은 주택 재정수요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로 밝혀져 인적자본이 축적될수록 주택건설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는 주택건설 재정수요의 규모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9) 문화오락 재정수요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문화오락 재정지출에 대한 추이와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 그림 8. 문화오락 관련 재정지출 변동추이



주: Cultural Expenditures는 문화오락관련 재정지출수준을 CULTURER2는 총재정지출 대비 비중을 나타냄.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오락 재정지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1987년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총재정지출에서 문화오락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이후 크게 두 번의 순환국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현재는 문화오락 지출이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오락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8>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것은 GDP에 대한 총지출의 탄력성 즉 문화오락 재정수요의 소득탄력성이 -2.34로서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문화오락 재정지출은 2.34% 감소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문화오락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종의 기펜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의 문화오락 지출이 오랜 기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문화오락 서비스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조세부담률(변수 TAXRATE)에 대한 추정계수는 2.86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인구규모가 1% 증가하는 경우 문화오락 지출은 무려 3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는 반대방향으로 문화오락 재정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문화오락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경우 소득과 인구의 상충된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산업구조가 문화오락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문화오락 지출에 대한 재정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역시 문화오락 재정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FOREIGN 변수)가 커질수록 문화오락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구조는 문화오락 재정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야별 중기 재정수요 전망: 2007 ~ 2011년

모든 재정수요의 절대수준은 당연히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분야별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재정수요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순환형 변동 유형 재정수요 전망

다음 <그림 9>에는 분야별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는 재정수요가 정리되어 있다. 순환형 패턴(cyclical pattern)을 보이는 재정수요에는 경제개발 재정수요(ECONOF1R), 주택건설재정수요(HOUSINGF1R) 및 교육재정수요(EDUF1R)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 재정수요와 주택건설 재정수요가 경기에 따라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교육 재정수요가 순환하는 변동양상을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에 의하면 2006년부터 경제개발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택건설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교육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순환형 변동을 보이는 유형의 분야별 재정수요의 연도별 규모는 다음 <표 2-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그림 9. 순환형 변동 유형 재정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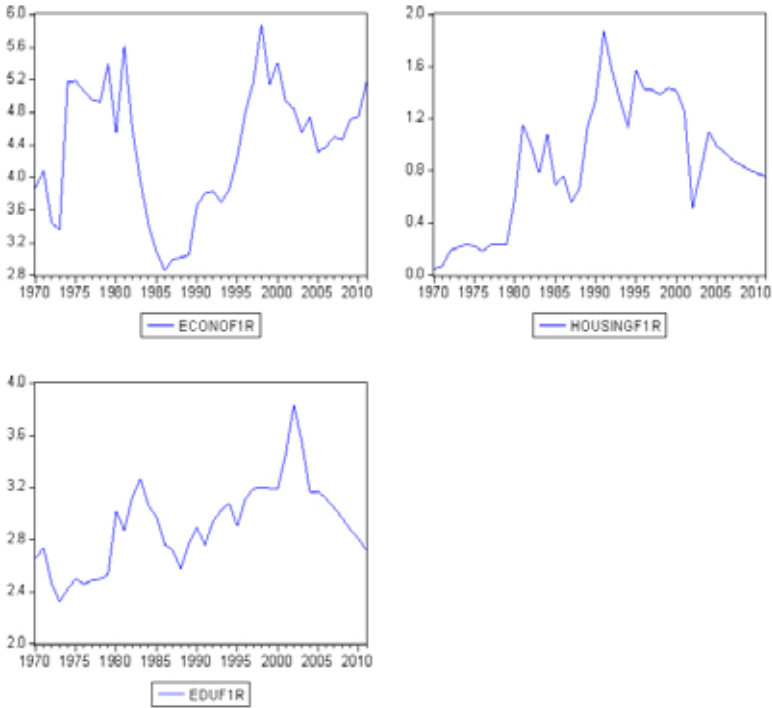


표 2-1. 순환형 변동 유형의 중기 재정수요 전망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개발 재정수요	규모(억 원)	380,580	418,734	446,377	506,586	548,811	642,697
	대GDP비중(%)	4.31	4.50	4.46	4.71	4.74	5.17
주택건설 재정수요	규모(억 원)	81,850	82,145	84,431	87,196	90,474	94,385
	대GDP비중(%)	0.94	0.88	0.84	0.81	0.78	0.75
교육 재정수요	규모(억 원)	271,115	283,592	296,722	309,844	325,047	337,979
	대GDP비중(%)	3.11	3.04	2.96	2.88	2.81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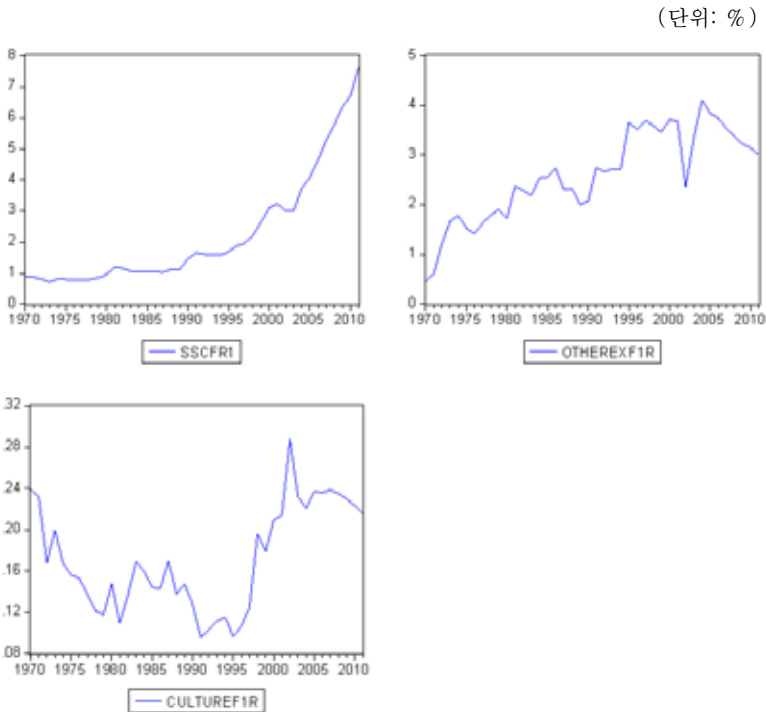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추정

<표 2-1>에 의하면 경제개발 재정수요는 2006년 38조580억 원으로 GDP 대비 4.31%를 점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GDP의 5.17%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 재정수요와 주택건설 재정수요는 2006년 GDP 대비 비중이 각각 3.11%와 0.94%에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 증가형 추세의 재정수요

다음 <그림 10>에는 분야별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재정수요가 정리되어 있다. 증가형

그림 10. 증가형 추세의 재정수요



패턴(increasing pattern)을 보이는 재정수요에는 사회보장 재정수요(SSCF1R), 기타 재정수요(OTHEREXF1R) 및 문화오락 재정수요(CULTUREF1R)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 재정수요는 절대수준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함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정책목표가 분배 우선이었다는 점도 간과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오락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형 추세를 보이는 유형의 분야별 재정수요의 연도별 규모는 다음 <표 2-2>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2-2. 증가형 추세 유형의 중기 재정수요 전망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보장 재정수요	규모(억 원)	401,955	490,378	577,296	681,854	775,836	947,456
	대GDP비중(%)	4.62	5.27	5.77	6.34	6.71	7.62
기타 재정수요	규모(억 원)	325,606	329,271	337,596	346,383	363,218	373,218
	대GDP비중(%)	3.74	3.53	3.37	3.32	3.14	3.00
문화오락 재정수요	규모(억 원)	205,348	221,819	235,128	247,341	258,261	267,269
	대GDP비중(%)	0.23	0.23	0.23	0.23	0.22	0.21

자료: 저자 추정

<표 2-2>에 의하면 사회보장 재정수요는 2006년 40조1,955억 원으로 GDP 대비 4.62%를 접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94조 7,456억 원으로 GDP의 7.62%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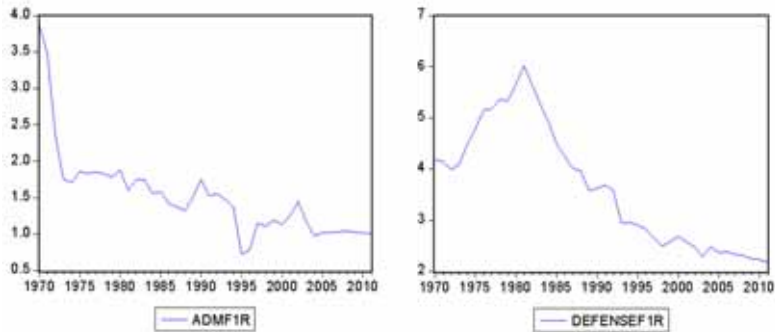
한편 기타 재정수요와 문화오락 재정수요는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재정수요는 2007-2011년 기간 동안의 감소가 일시적인 감소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소형 추세의 재정수요

다음 <그림 11>에는 분야별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재정수요가 정리되어 있다. 감소형 패턴(decreasing pattern)을 보이는 재정수요에는 일반행정 재정수요(ADMF1R) 및 국방 재정수요(DEFENSEF1R)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정부의 생산성이 점차 제고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국방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별다른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다.

그림 11. 감소형 추세의 재정수요



감소형 추세를 보이는 유형의 분야별 재정수요의 연도별 규모는 다음 <표 2-3>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2-3>에 의하면 일반행정 재정수요는 2006년 8조9,090억 원으로 GDP 대비 1.02%를 점하다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2011년에는 12조4,820억 원으로 GDP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방 재정수요는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 재정수요는 2006년 20조6,895억 원으로 GDP 대비 2.37%를 점하다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여 2011년에는 27조377억 원으로 GDP의 2.17%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감소형 추세 유형의 중기 재정수요 전망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반행정 재정수요	규모(억 원)	89,090	96,223	104,123	110,612	117,497	124,820
	대GDP비중(%)	1.02	1.03	1.04	1.02	1.01	1.00
국방 재정수요	규모(억 원)	206,895	217,319	231,133	241,587	257,422	270,377
	대GDP비중(%)	2.37	2.33	2.31	2.24	2.22	2.17

자료: 저자 추정

3. 신규 재정수요 전망

재정수요의 두 번째 유형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재정수요이다. 신규 재정수요는 고령화와 저출산 경향과 같은 경제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적인

환경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재정수요의 변화와 경제의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정수요 등과 같은 재정수요로 구성된다. 또한 신규 재정수요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기 재정수요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중기 재정수요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건설 분야 재정수요에는 신행정부합도시 건설에 대한 재정수요가 예상되며, 국방 분야 재정수요에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및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경제개발 분야 재정수요에는 농업농촌대책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예상되며, 사회보장 분야 재정수요에는 EITC 준비에 소요되는 재정수요가 예상된다. 만약 우리가 중기 재정수요 전체 규모를 예측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선 전망에 의한 재정수요에 신규 재정수요 규모를 합산하여 예측하면 될 것이다.

4. 기타 재정수요

재정수요의 세 번째 유형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로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재정수요이다. 일시적인 재정수요(transitory fiscal demand)는 근본적으로 확률변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전망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망을 하지 않기로 한다.

Ⅲ. 장기 재정수요 전망

1. 주요 경제사회 환경요인 전망

1) 고령화와 저출산

(1) 고령화와 저출산 추이

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은 무엇보다도 고령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국가의 인구구조는 주로 사망률과 출산율에 의해 결정된다. 출산율의 변화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 반해 사망률의 변화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각 연령대별 사망률을 모두 고려하여야 되므로 쉽지 않다. 따라서 연령대별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균수명이라는 지표가 인구구조를 파악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경제가 발달하여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고령화를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1971년에 62.3세에서 2000년에는 76.02세, 2003년에는 77.46세까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83.0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1. 우리나라 평균수명 추이

연도	1971	1980	1990	2000	2003	2010	2020	2030	2050
전체	62.3	65.69	71.28	76.02	77.46	78.8	80.7	81.5	83.0
남자	59.0	61.78	67.29	72.27	73.87	75.5	77.5	78.4	80.0
여자	66.1	70.04	75.51	79.59	80.82	82.2	84.1	84.8	86.2

자료: 통계청 KOSIS(2006)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의 또 다른 요인은 출산율의 하락이다. 출산율의 지표는 다양하나 보통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표 3-2>에 볼 수 있듯이 1960년에는 6.0명으로 최고의 수준에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70년에는 4.53명, 1980년에는 2.83명에 이른 후 1983년에는 마침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이 1.5~1.7명 수준을 유지하며 그 당시부터 이미 저출산현상이 고착화 되는 것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표 3-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변동 추이

연도	1960	1970	1980	1983	1990	2000	2001	2003	2004
합계출산율(명)	6.00	4.53	2.83	2.08	1.59	1.47	1.30	1.19	1.16
출생아(만명)	104	100	86	77	65	63	55	49	4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연도.

출산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로 낮아져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

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아진 결과 연간 출생아 수는 1960년 104만 명에서 2004년 47.6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지역별로 출산율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서울(1.00명), 부산(0.95명), 대구(1.08명), 인천(1.05명) 등 대도시의 출산율이 낮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과 가족구조와 가치관과 변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저출산의 첫째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최근 노동 시장의 유연화에 의한 임시직과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의한 청년실업의 증가로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결혼 후에도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한 것이다. 저출산의 두 번째 경제적 요인은 출산 후 자녀의 양육과 교육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의 비경제적 요인을 보면 첫째로 결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문명이 발달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와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소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다수의 자녀를 갖는 것보다 좋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도 육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기능이 취약하여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고령화와 저출산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유년층(15세 미만) 인가와 노년층(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표 3-3>에는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구성비의 추이가 정리되어 있다.

표 3-3. 우리나라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명, %)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31.4	37.4	43.4	47.0	49.6	50.7	50.3	48.2	44.3
0~14세 인구	42.5	34.0	25.6	21.1	16.3	12.6	11.2	10.1	9.0
15~64세 인구	54.4	62.2	69.3	71.7	72.8	71.7	64.7	57.9	53.7
65세 이상 인구	3.1	3.8	5.1	7.2	10.9	15.7	24.1	32.0	37.3

자료: 통계청 KOSIS(2006)

고령화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부양비(dependency rate)와 노령화지수 등이 있다.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에서 부양인구(15세 미만 인가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그중 유년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년 부양비라 하고, 노년부양비는 노년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표 3-4>에는 1960년 이후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부양비 추이가 정리되어 있다.

표 3-4. 우리나라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총 부양비	82.6	83.8	60.7	44.3	39.5	37.3	39.4	54.7	72.6	86.1
유년부양비	77.3	78.2	54.6	36.9	29.4	22.3	17.6	17.4	17.4	16.7
노년부양비	5.3	5.7	6.1	7.4	10.1	14.9	21.8	37.3	55.2	69.4
노령화지수	6.9	7.2	11.2	20.0	34.3	66.8	124.2	214.8	316.6	415.7

자료: 통계청 KOSIS(2006)

주: 총부양비=부양대상인구/총인구, 유년부양비=유년(15세 미만)인구/총인구,
 노년부양비=노년(65세 이상)인구/총인구,
 노령화지수=노년인구/유년인구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0.1%로 두 자리 수를 넘어선 후 2020년 21.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년부양비의 추세는 2050년 69.4%에 이르게 되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3-4>의 5째 줄에는 유년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정리되어 있는데 2020년에 124.2로 100을 추월한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415.7로 유년인구 1명당 노년인구가 4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외국 제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노년인구 비중이 7%인 사회)에서 고령사회(노년인구 비중이 14%)로 전환되는 데 불과 19년밖에 소요되지 않고, 다시 초고령 사회(노년인구 비중이 20%)로 진입하는 데 7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세계화의 가속화

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요인의 하나는 세계화의 커다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화가 경제적으로 갖는 의미는 과거 국경에 의해 분리되었던 시장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범세계적으로 단일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의 개방화에 반대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화 진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진전은 특정 사상이나 가치관에 기초하기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실리적인 외교노선과 경제적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은 1995년 전 세계 재화시장의 20% 정도에 그쳤으나 2010년경에는 약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및 소비재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며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 간의 무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OECD의 전망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세계화에 의한 이익을 이해 당사국 상호 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촌 시대(New Global Age)'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⁴⁾

세계화의 진전은 현재 수많은 국가 간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의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FTA가 관계 당사국 간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경우마다 각기 다를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경쟁에 기초한 범세계적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⁵⁾

4) OECD, *The World in 2020: Towards a New Global Age*, 1997.

5)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

FTA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당사국 간 공통된 문제는 FTA에 의해 손실을 받는 이해집단을 여하히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FTA에 의해 얻는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후술하겠지만 성공적인 FTA를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FTA에 의해 타격을 받는 집단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3) 잠재성장률의 둔화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수출주도형의 양적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1980년대까지는 8%에 이르는 잠재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고도의 잠재성장률의 시현이 가능하였던 것은 자본의 축적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에서 자본의 축적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체감 없이 생산물의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노동의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으로 숙련된 노동력의 이용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단순한 투입량의 증가에 의해서도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0년대에 성숙단계에 들어서며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급속히 감소하면서 동시에 투입량도 감소하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6%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5%까지 떨어지게 되었다.⁶⁾

면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6) 한국은행(2004)의 연구에 의하면 성장잠재력을 노동과 자본 등 요소조건, 기술·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기술발전과 중국경제의 부상 등에 의해 기업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인구경제학적 요인에 기인한 요소측면의 공급 감소와 불확실한 수요에 의한 투자 위축 등으로 획기적인 기술혁신에 의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급격한 상승이 없는 한 성장잠재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나 비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전망의 잠재성장률 범위는 1~3%까지 상당히 큰 편이다.

4) 양극화의 심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소득분배의 격차가 심화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도 심화, 세대 간 소득계층별 정보격차의 심화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 경제의 양극화(polarization)라 부르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갖는 불평등도(inequality)가 심화되는 현상 또는 형평성(equity)이 악화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극화에는 소득의 양극화, 산업 간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중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끄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원인에 대한 요인분석은 실로 다양하나 그 들 분석의 공통점은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기술격차 및 정보격차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

도조건, 산업연관관계 및 수요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한국경제가 1990년대 이후 기술발전과 수요기반 확충 등 혁신요건을 일부 갖추긴 하였으나 부품·소재의 해외의존도 심화 등으로 산업연관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히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내수와 수출기업의 격차가 심화된 것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대 약점은 시장에 의한 소득 분배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5) 기타 환경요인

한국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기타 환경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이다. 특히 남북통일은 한국경제와 더 나아가 한국의 장기 재정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국제사회에서의 돌출 행동으로 북한 핵문제, 미사일 공격문제 등 남북관계의 제반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전망은 항상 영을 기준으로 하여야 될 것이다.

2. 주요 경제사회 환경변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

1)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고령화가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로는 소위 유발 조기은퇴 효과(induced early retirement effect) 혹은 유발 지연은퇴 효과(Feldstein, 1974)

로 설명될 수 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조기에 은퇴하게 되고, 은퇴 후 잔여생애기간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소비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소득의 불안정성 증가에 의한 소비의 시제간 평탄화(intertemporal smoothing) 노력에 의한 소비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즉 고령화가 진전되면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어 이는 현재 소비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측을 세대별 소비성향을 통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생산가능인구 세대의 한계소비성향이 은퇴 후 노령층 세대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므로 고령화에 의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는 증가하므로 경제전체로는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령화의 진전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 납부자 수의 감소와 수급자 수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지는 적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뒤이어 정부는 4대 연금의 재정적자 증가를 지출의 감소나 조세의 증가로 상쇄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가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감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 감소는 결국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여타 소비를 위축시켜 가계소비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화의 진전은 전반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이 높다.

(2)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고령화가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의 진전은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경기에측을 비관하게 만들어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는 주택투자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의 설비투자와 주택투자의 감소는 다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킴으로써 또 다시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3) 정부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정부지출은 크게 정부 소비지출(경상지출)과 정부 자본지출(투자) 및 정부 사회보장지출로 구성된다. 고령화는 세 유형의 정부지출 중 사회보장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급여 수령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건강보험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고령화는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4)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고령화가 진전되면 전반적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김동석(2004a)은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성장회계방식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동석(2004a)에 의하면 고령화에 의해 노동과 자본 투입의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5%)이고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3.56%(2.91%), 2030년대 2.25%(1.60%), 2050년대 1.38%(0.74%)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5) 고령화가 노동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고령화의 진전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신관호·황윤재(2005)에 의하면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대일(2004)은 노동공급의 질적 측면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고령화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이 0.09~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령화와 저출산이 장기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이상과 같이 고령화와 저출산이 거시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장기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계 저축과 정부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증가는 가계 저축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존재할 것이다.⁷⁾

한편 국민연금의 증가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킬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증가가 정부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국민연금제도가 어떠한 방식인가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7) 이를 Feldstein의 구축 효과라 부른다.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적립방식(funded system)인데 국민연금의 개별 납부자는 자신이 적립한 것만큼 은퇴 후 급여로 수취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인데, 이 제도하에서는 동일한 시대에 사는 젊은 세대가 납부한 연금을 늙은 세대가 수령하여 지탱되는 제도이다. 부과방식하에서 국민연금의 증가는 정부저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부분 적립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⁸⁾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수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 정부가 적자규모만큼 재정에서 메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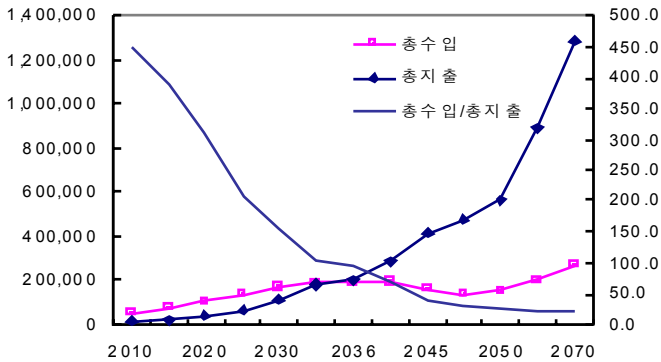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재정적자의 발생원인은 연금재정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나, 기금의 운영수익률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투자여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및 퇴직자 규모 등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혼용 체제이므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고령화가 정부재정 및 사회보장체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경로(channel)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

8)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은 112.3 조 원이다. 국민연금 기금 공공부문과 복지부문 및 금융부문에서 운용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자금 예탁금 항목으로 빌려 쓰고 있는데 2003년 말 현재 전체 기금규모의 13.6%인 15 조 2,512억 원에 이르고 있다.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시설투자 및 용자대부 등 자체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전체 기금규모의 0.4%인 4,414억 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국채 및 회사채, 주식 및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령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의해 국민연금의 기여는 축소되고 급여는 증가하여 기금의 적립분이 축소될 것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의 재정추계에 의하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36년 기금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이 소진된 2050년에는 보험료를 30%, 2070년에는 39.1% 인상하여야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림 12> 참조).

| 그림 12.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



자료: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문형표(2005)에서 재인용

국민연금제도가 한국경제의 장기 재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적자가 커질수록 궁극적으로 재정에서 보전하여야 되므로 재정수요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가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과연 어느 정도 장기 재정에 압박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

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방안은 국민연금의 연금채무(pension obligation) 또는 책임준비금이란 개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주체인 보험자가 사망확률 및 예정이율 등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수급자 및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되는 예상 채무액의 보험계리적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특정 시점에서 책임준비금이란 측정시점까지의 기연금수급자 및 기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채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가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책임준비금과 실제로 적립된 연금기금의 규모는 당연히 일치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부과방식이나 혹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분적인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책임준비금과 실제 적립금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며 이 차이는 미적립 연금부채(Unfunded Actuarial liability: UAL)로 정의된다.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및 책임준비금은 문형표·김용하(2004)에 의하여 추정되었는데 <표 3-5>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4.0%, 물가상승률은 2.0%로 이자율은 4.5%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 국민연금기금은 2031년에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되기 시작하여 2042년경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망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의 추계결과와 비교할 때 적자 발생 및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의 차이는 기금의 수익률의 기대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기금의 연평균 기대수익률이 7.5%(2002~2010년)에서 5%(2050년 이후)로 점진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가정한 데 비해 문형표·김용하(2004)는 기금운용의 연평균 기대수익률을 4.5%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3-5.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 원)

연 도	보험료수입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액	적립기금
2004	16,467	21,520	2,979	18,540	130,810
2005	17,343	23,229	3,359	19,870	150,680
2006	18,305	25,085	3,970	21,116	171,796
2007	19,300	27,031	4,863	22,168	193,964
2008	20,292	29,021	5,814	23,207	217,170
2009	21,345	31,117	6,904	24,214	241,384
2010	22,451	33,313	9,712	23,601	264,985
2011	23,624	35,548	10,396	25,152	290,137
2012	24,883	37,939	12,149	25,790	315,927
2013	26,061	40,278	10,486	29,792	345,719
2014	27,886	43,443	13,565	29,878	375,597
2015	29,233	46,135	15,776	30,359	405,956
2016	30,539	48,807	18,559	30,248	436,204
2017	31,777	51,407	21,381	30,026	466,229
2018	33,065	54,045	20,491	33,554	499,783
2019	35,260	57,751	25,364	32,387	532,170
2020	36,562	60,509	29,430	31,079	563,249
2030	52,466	86,455	81,124	5,331	760,644
2040	66,706	87,041	183,255	- 96,214	355,683
2050	84,123	32,766	273,214	- 240,448	- 1,381,724

주: 임금상승률: 4.0%, 이자율: 4.5%, 물가상승률: 2.0% 가정.

자료: 문형표·김용하(2004).

책임준비금의 경우 2004년 현재 동일한 가정(이자율은 4.5%, 임금상승률은 4.0%, 물가상승률은 2.0%)하에 약 278조에 이르는 것으로 문형표·김용하(2004)에 의하여 추정되었다. 한편 적립된 연금기금은 약 131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미적립 부채는 약 147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책임준비금의 규모는 현 제도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326조 원, 2020년 864조 원, 2030

년에는 1,883조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2040년 대 초반에는 기금 소진으로 전면적인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한국경제의 장기 재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3>~<그림 15>는 전영준(2004)이 추계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및 정부의 재정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각각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모든 부문에서 GDP 대비 수입의 비중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GDP 대비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따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그림 14>에 나타나 있듯이 공적연금의 수입인 보험료의 GDP 대비 비중은 4%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공적연금 급여지출 수준은 2000년 현재 GDP 대비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4.2%, 2040년에는 8.7%, 2060년에는 12.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그림 15>에 나타나 있듯이 수입인 보험료의 GDP 대비 비중은 1~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5%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자가 재정 전체의 적자를 초래하여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전망된다.⁹⁾

9) <그림 13>~<그림 15>는 전영준(2005)의 그림들이 그대로 차용되었다.

그림 13. 재정지출 및 수입액(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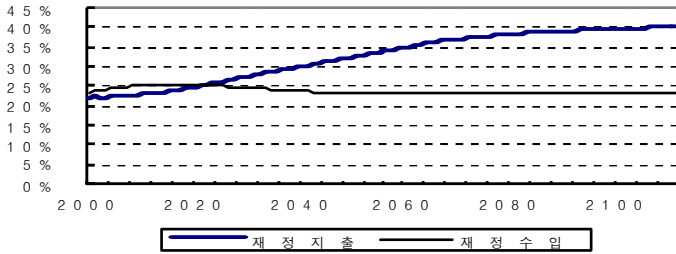


그림 14. 공적연금 급여 및 보험료(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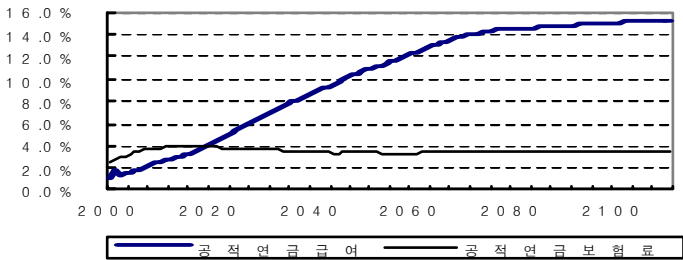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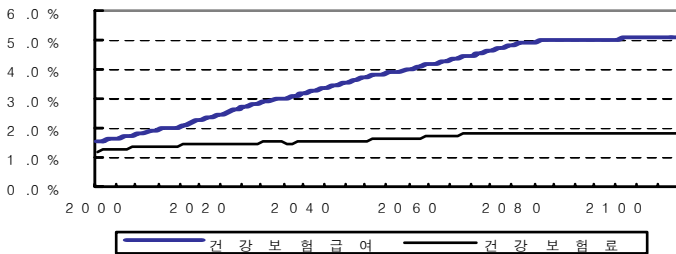


그림 15. 건강보험 급여 및 보험료(GDP 대비 비율)



결론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현재의 속도로 진행되고 현재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재정수요가 재정공급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재정의 초과수요 현상이 전망된다. 만성적인 재정의 초과수요는 궁극적으로 재정의 적자를 초래하게 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취약하여 질 것이다.

3) 세계화의 가속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세계화가 가속화되어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가 간 또는 특정지역 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생산물 시장과 요소시장에서 모두 국내 시장과 국외시장의 벽이 무너져 국내기업과 요소공급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자들과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무한경쟁의 결과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제통합의 피해자가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로서 한미 FTA 성사 뒤 농업분야와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민계층 등에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며, FTA에 따른 실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그에 따른 장기 재정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4) 잠재성장률의 둔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비록 둔화의 폭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언정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 정부가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출산율을 1명대에서 2명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여성인력의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율 회복과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보장 재정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¹⁰⁾

잠재성장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인 인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육 재정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문소상·이종건(2004)이 제시하였듯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심의 산업집적체제에서 개방형 산업집적체제로 개편하여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관련 재정수요의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10) 프랑스의 경우 1년에 50조 원 정도를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출산율 장려를 위한 정책방안은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좀더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5) 양극화의 심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21세기에 들어서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인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는 다양한 유형의 양극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될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실태를 파악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우 필요한 사회안전망 수준을 전망하여야 될 것이다.

(1) 현재 사회안전망 체계

사회안전망은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부조, 국민들의 복지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노후 소득보장, 건강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¹¹⁾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다음 <표 3-6>에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안전망은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 고용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에 1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고, 국민연금은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2000년 1인 이상 사업장

11)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06) 제4부를 참조로 기술되었다.

에 확대되었고, 건강보험은 2002년 급여가 확대 지급되었다.

표 3-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체계

사회안전망	제도	시행
1차 안전망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보험 • 고용보험제도 • 건강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확대(1999) • 1인 이상 사업장 확대(1998) • 365일 급여 확대(2002) • 1인 이상 사업장 확대(2000)
2차 안전망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경로연금 • 의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2000) • 구 노령수당에서 도입(1998) •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2005)
3차 안전망 (긴급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 및 현물지원: 의료/생계, 주거, 기타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06. 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6), p.217에서 인용

2차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도입되었고, 경로연금은 1998년 도입되었으며, 의료급여제도는 2005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다.

3차 안전망은 긴급복지지원으로서 금전 및 현물지원제도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제도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형식적으로는 3단계에 걸쳐 완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도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사회안전망의 필요조건인 혜택의 대상 범위가 전 국민을 포함하지 못하여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속하는 인구는 716만 명인데¹²⁾ 국민

12) 이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고 가구로는 2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8.5%에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138만 명에 불과하므로 578만 명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다.¹³⁾

둘째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부터 이미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는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전체 가구의 43%(615만 가구)가 무주택 세대로 주기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셋째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이 약하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2)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사회안전망의 확충의 필요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문제는 어느 분야부터 사회안전망 확충의 우선순위가 있는가와 관련 장기 재정수요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6) 기타 환경요인의 변화가 장기 재정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적 요인은 남북문제의 진전과 남북통일이 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 통일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는 그 규

해당한다.

13) 사각지대는 다시 세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사각지대 I은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으로 177만 명이 속한다. 사각지대 II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86만 명이 속하며, 사각지대 III은 정책표적집단 외 차상위계층으로 315만 명이 속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참조).

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이 될 것이다.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될 과제로 이른바 통일비용 문제가 최근 주목을 받아왔다. 원래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당시 ‘통일 후 특정기간 이내에 동독주민의 1인당 GNP가 서독주민의 1인당 GNP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서독정부가 지출하여야 되는 재정 소요액’이라 정의한 것에 연유한다.¹⁴⁾

14) 남북한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이종원(2002)의 11장의 내용을 기초로 기술되었다.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요에 대하여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재정수요는 정부부문이 공급하여야 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다. 재정수요는 크게 세 가지 유형-경상적 재정수요, 신규 재정수요 및 임시적 재정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경상적 재정수요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변동추이를 토대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신규 재정수요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서 집권 정부의 정책의지도 반영된다. 셋째로 예상치 못한 돌발적 요인에 발생하는 임시적 재정수요는 근본적으로 확률변수의 속성을 갖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적 재정수요를 중심으로 중기 재정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MF의 통합재정수지 체계에 의해 정부지출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 분야별 재정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 1970~2005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수요를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변수(GDP)와 공공재의 가격변수로서 조세부담률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키고 기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추가로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재정수요의 변동추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 분야별 재정수요의 변동패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첫째 유형은 순환적 변동

15) 물론 재정수요의 절대적 수준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

(cyclical fluctuation)을 보이는 것으로서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 주택 건설 재정수요 및 교육 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유형은 점진적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국방 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유형은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사회보장 재정수요와 문화오락 재정수요 및 기타 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유형별 재정수요의 변동을 토대로 2006~2011년 기간 동안 각각의 재정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였다. 재정수요의 유형별 예측결과, GDP 대비 재정수요의 비중의 관점에서 순환적 재정수요의 경우 경제개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주택건설 재정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의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경제개발 지출을 감소하는 것으로 충당하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별로 올바른 정책방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국방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국방 재정수요는 2011년 GDP의 2.2% 수준까지 감소하고, 일반행정 재정수요는 2011년 GDP의 1%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반행정 재정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 정부는 일반행정 재정지출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조직과 행정제도를 개편하여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 재정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방부문의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수요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중점적으로 추정하였다.

할 것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수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예측결과가 나와 2011년 GDP의 7.6%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예측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평가된다. 단 문제는 적절한 수준과 재원충당의 수단이 될 것이다. 문화오락 재정수요의 경우 장기적인 추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중기적으로는 약간의 등락이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중기 재정수요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중기 재정수요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건설 분야 재정수요에는 신행정부합도시 건설에 대한 재정수요가 예상되며, 국방 분야 재정수요에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및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경제개발 분야 재정수요에는 농업농촌대책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예상되며, 사회보장 분야 재정수요에는 EITC 준비에 소요되는 재정수요가 예상된다. 만약 우리가 중기 재정수요 전체 규모를 예측하여야 되는 경우 기준선 전망에 의한 재정수요에 신규 재정수요 규모를 합산하여 예측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장기 재정수요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현행의 조세제도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 사회보장 재정수요의 점진적인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극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수요는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의 둔화는 근본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장기 재정수요는 장기 재정공급을 초과하여 전형적인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희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재정의 초과수요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방안은 재정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는데 조세제도의 개편과 같은 제도적 개편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방안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그와 함께 한국경제는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근본적으로 성장전략을 바꾸어야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둘째 방안은 재정수요를 분야별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재정수요를 통제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잠재성장률을 제고시켜 재정공급을 근본적으로 확충시킴으로써 재정의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및 경제적 기회의 분배 및 재분배를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전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관련된 정책목표인 반면 후자는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관련된 정책목표

이다. 장기적으로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 재정정책의 과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있으며, 이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추구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선(편), 『중기재정계획(1998~2002)의 주요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9.
- _____,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4-07,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3.
-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 재정시물레이션을 위한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2004.
- 국회예산정책처,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5~2009년』, 2005.
-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 김기호·장동구,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 분석」, 『경제분석』, 제1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pp.106-134.
- 김대일, 「인구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심포지엄,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김동배, 「인적자원관리」,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1987~2002』, 제7장, 한국노동연구원, 2003, pp.179-213.
- 김동건·김성태·안중범·원윤희·이연호, 『적자재정기조하의 중기재정운용방안』, 기획예산처 예산실 용역보고서, 1998. 11.
- 김동석,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심포지엄,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김성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헌적 고찰」, 『한일경상논집』, 제27권, 한일경상학회, 2003, pp.67-85.

- _____, 「재정적자의 과급효과와 지속가능성.», 『재정논집』, 제15집 제2호, 한국재정학회, 2001, pp.3-31.
- 김양우·장동구·이궁희, 「우리나라의 巨視計量經濟模型-BOK97.», 『경제분석』, 제3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7, pp.1-71.
- 김양우·이궁희·장동구, 「韓國의 短期經濟豫測시스템.», 『경제분석』, 제3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7, pp.1-61.
- 김양우·이궁희, 「새로운 年間巨視計量經濟模型-BOKAM97.», 『경제분석』, 제4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8, pp.31-79.
- 김원규,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 가능성과 시사점.», 『산업경제정보』, 제239호, 산업연구원, 2004.
- 김용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정부재정에 대한 효과 분석.»,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연구보고서 2003-06, 한국개발연구원, 2003.
- _____,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김종면, 『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분석』, 연구보고서 02-05,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종면·성명재,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4-02, 한국조세연구원, 2004.
- 김종면·이철희·전영준, 『고령화 현상에 수반되는 사회경제 변수 및 의료지출의 변화』, 한국조세연구원, 2003.
- 문소상·이종건, 『성장잠재력 결정요인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2004.
- 문형표, 「공적연금제도의 운용평가와 개혁과제.», 『제5차 한국응용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논문집』, 2005, pp.35-80.
- 문형표·김용하, 「인구고령화와 저축: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과급효과 및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
- 문형표 외,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경제사회 소관 연구기관 고령화 대비 협동연구 시리즈 04-06, 한국개발연구원, 2005.
- 박종규, 『한국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 KIPF96Q』, 연구보고서 96-08, 한국조세연구원, 1996.

- 박종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한 우리나라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 KIPF97Q』, 한국조세연구원, 1998a.
- _____, 「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및 정책방향』, 국제심포지엄 자료 98-05, 한국개발연구원, 1998b, pp.55-116.
- 박종규·성명재·박기백·전영준, 『중기재정 전망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0-12, 한국조세연구원, 2000.
- 박형수,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재정포럼』, 2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백웅기·오상훈, 「한국의 거시경제 분기모형: KDIQ92」,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1993.
- 성명재·박형수·전병목·박기백·김현아, 『우리나라 중장기 건정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재정 전망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03-01,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신관호·황윤재, 「인구구조의 변화가 실질임금 및 총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제1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pp.1-34.
- 안종범, 「고령화가 조세부담물에 미치는 영향」, 최경수·문형표·신인식·한진희(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한국개발연구원, 2003.
- _____, 「인구고령화와 소비」,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심포지엄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발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이연호, 「한국의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한가? -NPG 조건의 검정과 재정적자 조달방법」,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01.
- 이종건, 「年間巨視計量模型(BOKY94) 開發結果」, mimeo, 한국은행 조사 제1부, 1994.
- 이종원, 『한국경제론』, 율곡출판사, 2002.
- 이혜훈,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2, pp.23-50.

- 전영준, 「사회보장지출 및 세대간 재정부담 추계」, 『정부학연구』, 제10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4, pp.59-95.
- _____,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모색」, 『제5차 한국응용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논문집』, 2005, pp.5-33.
- 전주성, 「재정기조의 평가: 정책기능과 건전성」, 『공공경제』, 제9권 제2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 11, pp.293-315.
- 좌승희·황성현·이선애, 「韓國經濟의 年間巨視模型 과 政策效果 分析」,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3 겨울, pp.3-35.
- 최경수·문형표·신인식·한진희,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최준욱·전병목, 『인구구조변화와 조세재정정책(I):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3.
- _____, 『인구고령화와 재정』,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고령화 대비 협동연구 시리즈, 04-07,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최준욱·전병목·김우철, 『인구구조변화와 조세재정정책(II): 고령화 대응 조세,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04-09, 한국조세연구원, 2004.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5a.
- _____,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 방향』,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5b.
- 한국은행, 『韓國經濟의 巨視計量模型』~1990.
- 한진희,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가」,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제3장 제2절, 연구보고서 2003-06, 한국개발연구원, 2003.
- 함정호·최운규, 「韓國經濟의 年間巨視計量模型 - BOKAM90」, 『금융경제연구』~제17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0.

- 홍공숙·김순미·김연정, 「미국노인의 유산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5.
- 홍기석, 「인구구조 고령화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제3장 제1절, 연구보고서 2003-06, 한국개발연구원, 2003.
- Ahmed, S. and J.H. rogers, “Government Budget Deficits and Trade Deficits are Present Value Constraints Satisfied in Long-run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s* 36, 1995, pp.351-374.
- Huh, Hyeon-Seung, R. Jha, and C.M. Koo, “Debt Sustainability in East Asia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6, No.2, 2005.
- Hviding Ketil and Marcel Merette, “Macroeconomic Effects of Pension Reforms in the Context of Ageing Populations: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Simulations for Seve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 No.201, 1998.
- Miles, David, “Modelling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Upon The Economy,” *Economic Journal*, Vol.109, 1999, pp.1-36.
- Sadahiro, Akira and Manabu Shimasawa, “Ageing, Policy Reforms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 in A Computable Two Country OLG Model,” *ESRI Discussion Paper*, No.97, Cabinet Office, Japan, 2004.
- , “The Computab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an Endogenous Growth Mechanism,” *Economic Modelling*, 20, 2002, pp.1-24.
- Shimasawa, Manabu and Hidetoshi Hosoyama, “Economic Implications of An Aging Population: The Case of Five Asian Countries,” *Working Pape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Keizaihoka University, 2004.

I 부표 1. 총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TOTALEX)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GDP)	1.656455	0.213005	7.776612	0.0000
LOG(TAXRATE)	-0.094748	0.248532	-0.381229	0.7064
LOG(POP)	-8.804067	3.228909	-2.726638	0.0118
AGRATIO	0.120457	0.024817	4.853832	0.0001
SERVICERATIO	0.049503	0.011758	4.209944	0.0003
FOREIGN	0.006429	0.001623	3.961074	0.0006
HIGHSCHOOL/POP	0.071344	0.016637	4.288172	0.0003
AGEINDEX	0.105539	0.042631	2.475648	0.0207
POP65R	-0.535610	0.289071	-1.852871	0.0762
DUMMY70	-0.468870	0.143806	-3.260439	0.0033
DUMMY80	-0.149806	0.061600	-2.431912	0.0229
C	79.36968	32.45784	2.445316	0.0222
R-squared	0.999356	Mean dependent var		9.751040
Adjusted R-squared	0.999062	S.D. dependent var		1.811088
S.E. of regression	0.055481	Akaike info criterion		-2.684346
Sum squared resid	0.073876	Schwarz criterion		-2.156507
Log likelihood	60.31824	F-statistic		3388.319
Durbin-Watson stat	2.132806	Prob(F-statistic)		0.000000

부표 2. 일반행정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ADM)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GDP)	0.398967	0.173751	2.296205	0.0294
LOG(TAXRATE)	1.236536	0.486291	2.542793	0.0168
LOG(POP)	-0.459562	0.123922	-3.708465	0.0009
SERVICERATIO	0.041376	0.020897	1.979946	0.0576
FOREIGN	-0.007144	0.003885	-1.839020	0.0765
HIGHSCHOOL/POP	0.068170	0.034004	2.004742	0.0547
POP65R	0.184278	0.097835	1.883550	0.0701
DUMMY9596	-0.414673	0.157204	-2.637809	0.0135
R-squared	0.990845	Mean dependent var		7.258695
Adjusted R-squared	0.988557	S.D. dependent var		1.477089
S.E. of regression	0.158011	Akaike info criterion		-0.659180
Sum squared resid	0.699085	Schwarz criterion		-0.307287
Log likelihood	19.86524	Durbin-Watson stat		1.604805

부표 3. 국방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DEFENSE)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GDP)	2.165186	0.225681	9.594018	0.0000
LOG(TAXRATE)	0.056792	0.309165	0.183694	0.8556
LOG(POP)	-11.02193	3.449313	-3.195397	0.0035
SERVICERATIO	-0.019568	0.008840	-2.213675	0.0355
HIGHSCHOOL/POP	0.046490	0.020747	2.240837	0.0335
POP15R	0.170059	0.028897	5.884988	0.0000
POP65R	0.196439	0.066766	2.942219	0.0066
DUMMY80	0.140001	0.047004	2.978527	0.0061
C	94.93142	34.49657	2.751909	0.0105
R-squared	0.998292	Mean dependent var		8.158032
Adjusted R-squared	0.997785	S.D. dependent var		1.529196
S.E. of regression	0.071963	Akaike info criterion		-2.213022
Sum squared resid	0.139823	Schwarz criterion		-1.817142
Log likelihood	48.83439	F-statistic		1972.186
Durbin-Watson stat	2.121352	Prob(F-statistic)		0.000000

부표 4. 경제개발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ECONO)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GDP)	2.926295	0.655467	4.464442	0.0001
LOG(TAXRATE)	0.121407	0.555430	0.218582	0.8288
LOG(POP)	-15.98919	6.889819	-2.320698	0.0288
AGRATIO	0.172139	0.040736	4.225783	0.0003
SERVICERATIO	0.072887	0.032877	2.216915	0.0360
FOREIGN	0.019845	0.004903	4.047749	0.0004
HIGHSCHOOL/POP	0.058835	0.038943	1.510777	0.1434
POP15R	-0.499161	0.139244	-3.584805	0.0014
POP65R	-0.593290	0.184898	-3.208739	0.0036
DPR	0.243448	0.083612	2.911653	0.0075
C	140.0365	68.07304	2.057150	0.0502
R-squared	0.996430	Mean dependent var	8.288465	
Adjusted R-squared	0.995002	S.D. dependent var	1.776105	
S.E. of regression	0.125559	Akaike info criterion	-1.065615	
Sum squared resid	0.394126	Schwarz criterion	-0.581762	
Log likelihood	30.18108	F-statistic	697.8422	
Durbin-Watson stat	2.446377	Prob(F-statistic)	0.000000	

부표 5. 사회보장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SSC)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GDP)	2.919283	0.597203	4.888257	0.0000
LOG(TAXRATE)	-0.838305	0.553781	-1.513784	0.1417
LOG(POP)	-15.57346	6.931216	-2.246859	0.0330
AGRATIO	0.082944	0.053002	1.564942	0.1292
HIGHSCHOOL/POP	0.130434	0.038726	3.368086	0.0023
POP15R	-0.405743	0.080859	-5.017926	0.0000
DPR	0.263605	0.048823	5.399137	0.0000
DUMMY70	-0.449038	0.247745	-1.812499	0.0810
C	136.7598	68.13750	2.007115	0.0548
R-squared	0.997343	Mean dependent var		7.170048
Adjusted R-squared	0.996556	S.D. dependent var		2.205505
S.E. of regression	0.129427	Akaike info criterion		-1.039081
Sum squared resid	0.452287	Schwarz criterion		-0.643201
Log likelihood	27.70346	F-statistic		1267.036
Durbin-Watson stat	2.430387	Prob(F-statistic)		0.000000

부표 6. 교육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EDU)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 36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GDP)	0.500502	0.228480	2.190574	0.0367
LOG(TAXRATE)	0.718929	0.345849	2.078740	0.0466
LOG(POP)	9.367467	3.352388	2.794267	0.0091
SERVICERATIO	0.033671	0.011130	3.025186	0.0052
HIGHSCHOOL/POP	0.008168	0.009089	0.898654	0.3762
POP15R	0.065954	0.030751	2.144791	0.0405
C	-103.5993	34.40378	-3.011275	0.0053
R-squared	0.997797	Mean dependent var		7.907920
Adjusted R-squared	0.997341	S.D. dependent var		1.834226
S.E. of regression	0.094576	Akaike info criterion		-1.706163
Sum squared resid	0.259393	Schwarz criterion		-1.398256
Log likelihood	37.71093	F-statistic		2189.295
Durbin-Watson stat	1.200242	Prob(F-statistic)		0.000000

부표 7. 주택건설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HOUSING)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GDP)	4.048214	0.685431	5.906081	0.0000
LOG(TAXRATE)	-5.840963	0.947967	-6.161570	0.0000
LOG(POP)	-20.66508	8.465622	-2.441058	0.0212
AGRATIO	0.283423	0.076805	3.690166	0.0010
HIGHSCHOOL/POP	0.089472	0.033201	2.694848	0.0118
DUMMY70	-1.928702	0.358991	-5.372569	0.0000
DUMMY8588	-0.711480	0.166353	-4.276920	0.0002
C	192.3140	84.69363	2.270702	0.0311
R-squared	0.992027	Mean dependent var		6.393194
Adjusted R-squared	0.990034	S.D. dependent var		2.594431
S.E. of regression	0.259000	Akaike info criterion		0.329156
Sum squared resid	1.878275	Schwarz criterion		0.681049
Log likelihood	2.075187	F-statistic		497.7103
Durbin-Watson stat	2.364019	Prob(F-statistic)		0.000000

부표 8. 문화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CULTURE)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GDP)	-2.341952	0.505334	-4.634463	0.0001
LOG(TAXRATE)	2.867659	0.809915	3.540693	0.0014
LOG(POP)	35.95534	5.896555	6.097685	0.0000
AGRATIO	-0.149080	0.079237	-1.881448	0.0700
FOREIGN	0.012175	0.005418	2.247276	0.0324
C	-357.4789	59.45990	-6.012101	0.0000
DUMMY70	0.524652	0.349723	1.500193	0.1444
R-squared	0.986180	Mean dependent var		4.980484
Adjusted R-squared	0.983320	S.D. dependent var		1.761406
S.E. of regression	0.227484	Akaike info criterion		0.049196
Sum squared resid	1.500726	Schwarz criterion		0.357103
Log likelihood	6.114470	F-statistic		344.8962
Durbin-Watson stat	1.780002	Prob(F-statistic)		0.000000

부표 9. 기타 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OTHEREX)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LOG(GDP)	2.796205	0.389688	7.175506	0.0000
LOG(TAXRATE)	-3.315550	0.786221	-4.217070	0.0002
LOG(POP)	-2.077209	0.488440	-4.252740	0.0002
AGRRATIO	0.064725	0.038186	1.695002	0.1004
FOREIGN	0.004720	0.005119	0.922002	0.3639
POP15R	0.210233	0.059312	3.544550	0.0013
R-squared	0.990226	Mean dependent var		7.659428
Adjusted R-squared	0.988597	S.D. dependent var		2.182896
S.E. of regression	0.233104	Akaike info criterion		0.076344
Sum squared resid	1.630119	Schwarz criterion		0.340264
Log likelihood	4.625799	Durbin-Watson stat		1.981419